



## 수사기관 제공 통신자료 지난해 급증

2011년 상반기 대비 31.2% 증가

2013년 상반기 대비 7.7% 증가

- 민병주의원(새누리당,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)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‘이동통신사 등 통신사업자의 통신자료 제공현황’에 따르면,
  - 2012년 하반기 제공된 통신자료 요청건수는 모두 42만 5,739건이었음.
  - 이는 2011년 상반기보다 31.2%나 늘어난 것이며, 올해 상반기와 비교해서도 7.7% 많은 수준임.
- 요청 수사기관별로는 경찰이 30만 9,822건(전년 동기 대비 31.7% 증가)으로 가장 많았음. 검찰(84,600건/ 46.1% 증가), 군수사기관 등 기타(27,768건/ 4.9% 증가), 국정원(3,549건/ 24.4% 감소)이 뒤를 이은 것으로 나타남.
- 통신자료 요청 건수(요청 문서 기준)는 2010년 상반기 29만 3,241건, 2010년 하반기 29만 7,808건, 2011년 상반기 32만 6,785건, 2011년 하반기 32만 4,400건, 올해 상반기 39만 5,061건 등으로 계속 증가 추세를 보임.
  - 하나의 문서를 통해 함께 요청된 개별 전화회선들을 따로 집계하면, 총 요청 전화회선 수는 2010년 상반기 372만 3,126건에서 2011년 하반기 261만 7,382건으로 감소하다 지난해 상반기(385만 6,357건) 증가세로 돌아섰고, 하반기(402만 3,231건)에 더 늘어남.

<표1. 이통사를 포함 전기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 등에 제공한 통신자료 제공현황 >

(단위 : 건)

구 분			검 찰	경 찰	국정원	군수사기관 등	합 계
'10	상반기	문서건수	48,542 (2.5)	215,106 (5.8)	5,506 (-1.2)	24,087 (-3.7)	293,241 (4.3)
		전화번호수	710,852 (45.1)	2,845,373 (4.0)	35,382 (-2.6)	131,519 (-21.8)	3,723,126 (8.6)
	하반기	문서건수	50,992 (25.7)	215,956 (3.0)	5,180 (5.6)	25,680 (2.1)	297,808 (6.3)
		전화번호수	612,324 (23.8)	2,573,992 (-1.6)	40,636 (13.6)	194,714 (-35.9)	3,421,666 (-0.8)
'11	상반기	문서건수	57,923 (19.3)	237,777 (10.5)	5,380 (-2.3)	25,705 (6.7)	326,785 (11.4)
		전화번호수	677,840 (-4.6)	2,242,757 (-21.2)	50,362 (42.3)	260,650 (98.2)	3,231,609 (-13.2)
	하반기	문서건수	57,911 (13.6)	235,332 (9.0)	4,697 (-9.3)	26,460 (3.0)	324,400 (8.9)
		전화번호수	618,128 (0.9)	1,715,298 (-33.4)	52,617 (29.5)	231,339 (18.8)	2,617,382 (-23.5)
'12	상반기	문서건수	74,366 (28.4)	287,293 (20.8)	4,121 (-23.4)	29,281 (13.9)	395,061 (20.9)
		전화번호수	973,463 (43.6)	2,647,174 (18.0)	44,795 (-11.1)	190,925 (-26.8)	3,856,357 (19.3)
	하반기	문서건수	84,600 (46.1)	309,822 (31.7)	3,549 (-24.4)	27,768 (4.9)	425,739 (31.2)
		전화번호수	1,268,349 (105.2)	2,467,957 (43.9)	66,128 (25.7)	220,797 (-4.6)	4,023,231 (53.7)

\* ( )안은 전년도 동기 대비 증감률

- 통신자료는 이용자의 성명과 주민번호, 주소, 전화번호, 가입 및 해지일자 등의 신원정보를 담고 있음.
- 관련법은 법원과 수사기관 등이 통신자료를 요청하면 사업자가 해당 정보를 자유롭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  -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요청이 증가하면서 포털업체의 경우 '12년 하반기 법원의 영장이 없는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요청에는 불응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음.

□ 민병주 의원은 이러한 통신자료 증가세에 대해 “미래부가 통신사업자들의 개인정보 보호업무 관리 실태를 수시로 점검하고, 관계기관 회의 등을 통해 범위를 벗어나 부당하게 자료가 제공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”고 지적함.